

광화문 100만 촛불 ... 국민의 명령 “퇴진하라”



서울 광화문 광장 ‘촛불의 바다’ 2016년 민중총궐기 대규모 집회가 열린 지난 12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100만여명의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른쪽 위로 광화문, 경복궁 건너 멀리 어둠 속에 청와대가 보인다.

12일 촛불집회 6월항쟁 이후 최대 규모...광주·전남서 2만여 명 상경 靑, 3차 대국민 담화 등 수습책 고심...투쟁본부 “퇴진 때까지 집회 계속”

서울 광화문=특별취재단 임동욱 기자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하야’를 요구하는 ‘100만 촛불’의 거대한 함성을 생생하게 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2·3·4·5·6면

두 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와 국회 추천 총리 제안 등의 수습책에도 민심의 요구가 하야로 집약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검찰의 수사도 목전에 이르고 있어 박 대통령의 거취 결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13일 전일 촛불집회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 형태로 자신의 거취를 밝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만일 전격적으로 하야를 선언한다면 과도정부 구성, 총리 권한 대행, 조기 대선 등을 둘러싸고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 보다는 책임총리나 거국중립내각에서의 총리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새누리당 탈당과 2선 후퇴 정도의 수습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수습책을 민심과 야권이 수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권은 100만 촛불 민심을 들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야권을 넘어 여권에서도 검찰 수사에 맞춰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도 박 대통령이 퇴진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다시 국면전환식의 수습책을 제시한다면 민심과 야권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촛불 집회는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날 집회 규모에 대해 경찰은 26만 명, 주최 측은 10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008년 6월10일 광우병 촛불집회(주최 측 추산 70만명, 경찰 추산 8만명),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규탄 촛불시위

(주최 측 추산 20만명, 경찰 추산 13만명) 참가 인원을 넘어섰다.

이날 집회는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도심 행진, 오후 7시 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화제로 진행됐다. 참가자 중 8000여명은 범일이 허용한 행진 종착지인 내자동로터리 청와대 방면에서 경찰과 3시간 넘게 대치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KTX와 버스 등을 이용, 최소한 2만 명이 넘는 참가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10만여명이 상경해 집회에 동참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tuim@kwangju.co.kr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특별취재단

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분부장
박정욱 사회부 차장·김경민 기자
김진수 사진부 기자·김한영 수습기자

비박 “새누리당 해체·대통령 탄핵” 이정현 대표 “거국내각 출범 후 사퇴”

새누리당 비주류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당 해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2선 후퇴’를 요구해온 입장에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공식 촉구했다. 비주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또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년 1월21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수습방안을 내놴다. 또 “여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중립내각이 출범하는 즉시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여수여객이 지역사회 제헌에 올리는 글

여수시내버스 ‘시민평가단’ 서비스평가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시내버스 회사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체들의 재정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정책을 여수시가 지난해 10월 도입했습니다. 시민 공모를 통해 모집된 (연)200명의 ‘시민평가단’이 시내버스 3개사(여수여객, 동양교통, 오동운수)를 압행 탑승하여 ‘승객에게 인사하기’ ‘차량정결’ ‘교통법규 준수’ 등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시민평가단 서비스평가제’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첫 분기별 평가부터 2회 연속 여수여객이 1위를 차지한 이후, ‘시민평가단’은 사실상 ‘여수시(공무원) 평가제’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노출했습니다.

■ ‘시민평가단’은 허울일 뿐 사실상 ‘공무원 평가’로 전환했습니다.

당초 공무원평가 부분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6차례나 평가기준을 변경하며 공무원 평가 부분을 점차 늘려나가 전체 평가의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시민평가단’은 허울일 뿐 업체 길들이기용 ‘공무원평가제’로 변질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 지수’를 평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서울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타 시도의 경우 최우선 평가요소는 ‘차량 1대당 사고건수’ 등 ‘교통사고 지수’입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사고지수’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사 여수여객보다 사고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동양교통(=오동운수)을 배려한 때문으로 의심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 지수’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 서비스평가 결과를 전혀 ‘공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는 많은 시민이 참여한 공공정책이고 시민생활과도 밀접합니다. 따라서 평가결과를 시청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분기별 평가 결과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단 한 차례도 공지한 사실이 없습니다.(시행 한 달 만인 작년 11월 여수여객 1위라는 언론보도만 한차례 있었음) 시민과 소통하기 가장 좋은 정책임에도 평가 결과조차 ‘공지’하지 않는 여수시 무슨 속사정이 있겠습니까?

■ (총 100점 만점에서) ‘교통사고 지수’는 0점, 반면에 ‘캠페인 개최’ 실적은 10점입니다. 전시행정의 본보기입니다.

또 운전자교육 실적은 8점, 직원후생복지 추진실적은 5점입니다. 이에 비해 ‘캠페인 개최’ 실적은 무려 10점이나 됩니다. 직원복지, 교육, 사고관리 보다 ‘캠페인’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달에 3회 이상 전체인원의 95%가 참여해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다음날 새벽에 매연을 마시며 40분 이상 도로가에 피켓 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40분이하 감점 적용)

■ 동양교통의 축소 요구에 밀려 1위 업체의 차등지급금을 1/10로 줄였습니다. (※차등지급금 때문에 추가적인 시 예산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에서 떼어내 차등지급합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시민평가단의 운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재정지원금 차등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성과급) 지원도 할 예정이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수여객이 2분기 연속 1위를 차지하자 이 발표 후 불과 3개월 만에 공표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1위 업체의 차등지급금을 갑자기 1/10로 줄였습니다. 동양교통의 끈질긴 축소요구가 관철된 것입니다. 시민평가단 서비스평가제 결국 용두사미 정책이 되었습니다.

■ 평가 결과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공무원)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최소한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정보라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여수시가 임의대로 순위를 매기고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했던 대로 공무원 평가로 전환되자마자 세 번째 분기별 평가(2/4분기)에서 당사는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수여객(주) 임직원 일동